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사례
-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코로나19 대처 실태와 일본의 감염자 급감
- (미국) Houston 지역의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The Way Home Continuum of Care(CoC)
- (독일) 망각에 맞서는 방법: 아헨(Aachen)시의 역사 프로젝트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사례

전남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체계 강화 필요
 -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
 - *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 ①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 지원, ②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③ 일자리, 주거 등 정착 지원 강화,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화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 5대 전략 추진
 - * 귀농귀촌 저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실시
 - 2020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운영
 - *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실시
 - 서울에 소재한 중앙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정부의 정책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귀향인이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정보가 부족
- 지방차원의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모색
 - 전남은 2016년부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업 강화를 위해 2019년에는 서울 양재동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개소
 -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는 대도시 청년층과 은퇴자를 전남으로 유인할 전초기지로 수립
 - * 귀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핵심 기능은 서울센터가 수행하고, 전남 소재 센터는 도청 내 인구청년 정책관실에서 상담업무 위주로 수행

주요 기능

• 교육사업

- (입문교육) 전남도 인문학 중심 교육으로 희망자 준비과정 마인드 고취
- (시군별 상담교육) 수도권 귀농산어촌 희망자와 21개 시군 가교 역할
- (현장체험 및 실습교육) 유관기관, 장기교육연계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장기교육) 실수요자 중심 전남도 지역밀착형 교육으로 지역 유치 극대화
- (비대면 교육) 단계별, 분야별 귀농산어촌 온라인 교육

• 홍보사업

- (찾아가는 설명회) 공공기관, 기업 등 전직 센터를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매체홍보) 센터 및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
- (홍보물 제작) 전남도 귀농산어촌 정책 및 서울센터 홍보 극대화
- (홈페이지 유지보수) 귀농산어촌 정보제공 허브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
- (마을기자단 운영) 우수사례, 문화행사, 마을공동체 등 공감사례 확산
- (웹진 운영) 귀농산어촌 교육, 행사 및 공감사례 정보제공
- (박람회 참가) 전남도 통합 상담홍보관 및 시군 연계 효율적 박람회 참가

• 네트워크 강화 및 기타 주요 기능

- (전담인력 역량강화) 서울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 (실무 워크숍) 시군지원조직(행정, 지원센터) 전담인력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서울센터 자리매김 및 브랜드 전략 수립
- (농협연계) 매체홍보, 퇴직예정자 설명회, 자격증 취득 교육, 농식품 아이디어 발굴 경연대회, 농촌융복합사업 종합상담 지원 등

| 표 1 |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정보제공
길라잡이	개념 및 유형, 준비절차, 자가진단, 우수사례, 상담안내, 온라인 상담, 설명회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 전라남도 지원사업, 시귀농인의 집, 군지원사업, 체류형 지원센터, 토지구입·건축·입주, 농지취득 및 임대차, 농업인 경영체 등록, 지원기관,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 귀산 : 산림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산촌 생태마을 등 • 귀어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등
서울센터	서울센터 소개, 조직도, 교육신청

메뉴	정보제공
교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 서울 센터교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교육, 시군 교육기관, 그 외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농업기술 동영상 • 귀산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 귀어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교육, 주요양식기술 등
알림마당	공지사항, 귀농산여촌 뉴스, 귀농산여촌 크리에이터, 귀농산여촌 블로그, 전라남도 농정소식
나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빈집 • 논밭 - 어장(어선) - 산림 • 중고장터 • 구인구직 • 직접홍보
소통광장	자료실, 갤러리, 홍보영상, 소모임, 자주 묻는 질문

시사점

•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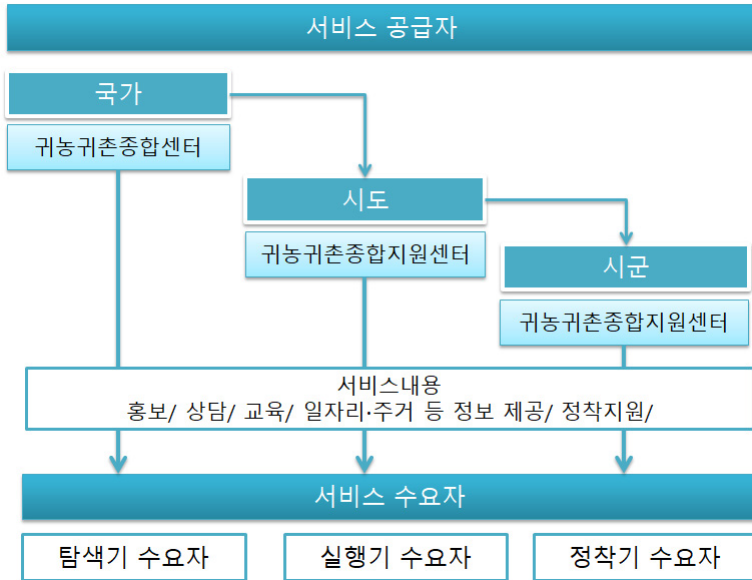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귀농귀촌 정보수요 증가
 - * 전체 귀농귀촌인 중 약 37% 차지하는 수도권 귀농귀촌인의 수요 대비
 - * 전남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탐색단계의 적시 정보제공
 - * 탐색단계에서 관심 유도, 귀농귀촌홍보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역 정보제공 필수
 - * 중앙단위의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관심 지역의 정보 및 지원정책 제약 극복
- 귀농보다 귀촌 비율이 높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귀촌 서비스 제공
 - * 귀촌 예비지역 선정 시 주거보다는 일자리 정보가 최우선시됨
 - * 지원센터로 일자리 문의 시 일자리정보시스템 연계 이상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

- 국가-도-시군 차원의 지원센터 역할 정립
 - * 국가: 전국단위의 귀농귀촌 관심 유도 및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서비스 공급
 - * 시도: 해당지역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시군 지원센터 간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 *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군 지원센터 역할 강화
 - * 도차원에서는 국가와 시군 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 영역(수도권 도시민 유입) 보완

-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및 시군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그림 1 | 귀농산어촌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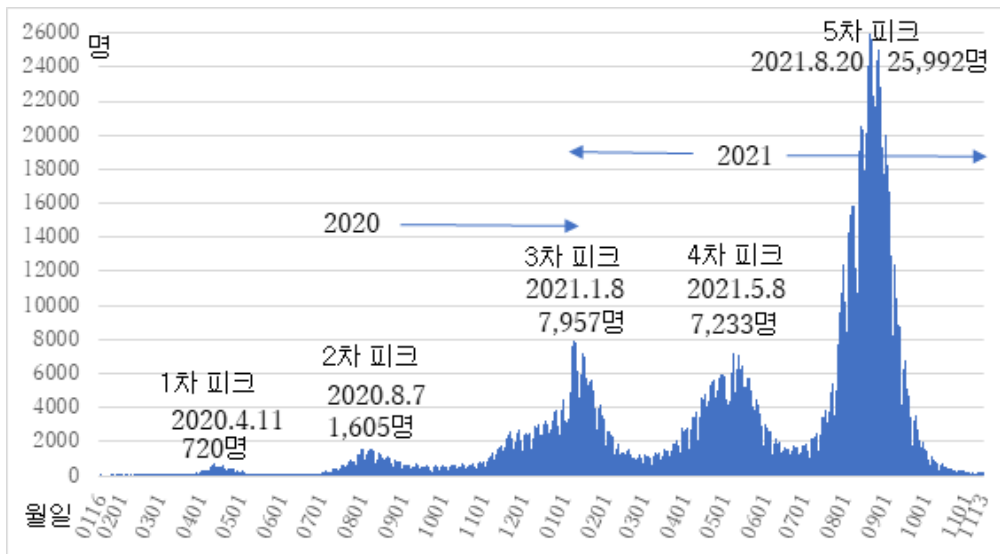
도쿄도(東京都)의 코로나19 대처 실태와 일본의 감염자 급감

개요

-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섯 차례의 유행 순환주기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음
- 도쿄도의 코로나19 대책 실태, 일본 정부의 감염 대책, 일본인들의 동조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함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와 다섯 차례 유행기

-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다섯 차례의 유행 확대 순환주기를 보이며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었음



자료: NHK(<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의 집계를 참고로 필자 작성.

| 그림 1 |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와 다섯 차례 유행기의 최대 확진자수

- 각 유행기의 피크(최대) 확진자수를 보면, 1차 유행기는 2020년 4월 11일 720명, 2차 유행기는 동년 8월 7일 1,605명, 3차 유행기는 2021년 1월 8일 7,957명, 4차 유행기는 동년 5월 8일 7,233명, 5차 유행기는 동년 8월 20일 25,992명임
- 이 결과로부터 1차-2차 유행기보다 3차-4차 유행기에 부쩍 늘어났고, 5차 유행기의 피크는 4차 유행기 정점의 3.6배에 이르렀으나 2021년 9월 이후 괄목할 감소하고 있음

도쿄도의 코로나19 대처 실태 (1) : ‘유령병상’의 문제

- 도래할지도 모를 6차 유행기 감염 확대에 대비해 도쿄도는 최대 6,891병상(病床)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상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병상을 다 가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아사히 신문 2021년 11월 13일자)
- 5차 유행이 한창이던 8월 31일 도쿄도는 6,046병상을 확보했으나 실제로 입원 가능했던 인원은 4,303명이었던 전력(前歴)이 있음. 이는 병실이 비어 있었는데도 가동될 수 없었던 ‘유령 병상’이 있었음을 의미함
- 도쿄도 간부는 “병상 확보 마련 노력과 함께 어떻게 의료 인원을 확보하여 병상을 가동시킬 것인가를 패키지로 묶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병상 사용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도쿄도는 감염 확대에 대응하여 산소스테이션 시설을 많이 설치하였으나 그 후 감염자가 급속히 줄어들어 실제 이용자는 적었음

도쿄도의 코로나19 대처 실태 (2) : 보건소 대응의 문제

- 5차 유행에서는 신고된 모든 감염자에 대해 보건소가 밀접접촉자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 병원을 확보하는 데도 난항을 겪었으며 자택요양(대기) 중에 사망자가 적지 않게 나타났음
- 도쿄도 네리마구(練馬区)의 경우 5차 유행기에 감염자 수가 최고에 달했을 때 입원할 수 있었던 감염자 수는 전체의 10% 미만이었는 데 이는 감염자 중 자택 대기자가 매우 많았음을 의미함
- 이들 자택 대기자에 대한 지원도 과제였던 터라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하면서 증상 악화 시에 사용되는 산소농축기를 의사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태도 빚어졌고 적절한 조치의 타이밍(timing)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음
- 당시 네리마구 보건소 소장은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여겨졌을 때는 이미 늦다. 감염 상황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 단계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미판명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일본

- 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에서는 2020년 9월~2021년 3월에 14개 공립병원에서 일반 외래 진료를 받은 2만 3,234명을 대상으로 항체 유무 조사로 2021년 3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었으나 감염자로 판명되지 않았던 인원수를 조사함
- 이 조사에서 3.4%가 항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비율을 도쿄도 인구 약 1,400만 명에 대응시켜 미판명 감염자가 약 47만 명이 될 거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도쿄도가 발표한 감염자 수 약 12만 명의 3.9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동 연구소의 오히라 미치노리(小原道法) 연구원은 “검사로 알 수 없는 무증상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여 조기 대책을 취하거나 무증상자가 감염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음

도쿄도의 코로나19 감염방비 대책

- 도쿄도는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5차 유행기에 의료제공 체제가 기능부전 상태였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병상 확보책 및 자택 요양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음
- 5차 유행에서는 최대 71.2%밖에 이용되지 않았던 병상 이용률을 8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도청 내의 입원조정본부에 전원(轉院)이나 퇴원(退院)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상황이 호전된 환자를 순조롭게 전퇴원(轉退院)을 유도함
- 의료제공 체제가 대응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의사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 가능한 의료 인원수를 사전에 등록하여 두는 ‘의료인재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숙박 요양 시설을 3,200실에서 4,500실로 늘리고 의사가 왕진하는 의료적 기능이 높은 시설과 원격으로 진료하는 시설로 나누어 병상을 보완함
- 자택 요양(대기)자에 대하여는 건강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추적센터(follow-up center)를 150인 체제에서 250인 체제로 확충하고, 혈중산소농도 측정기(pulse oximeter)를 10만 개에서 21만 개로 늘림
- 도쿄도 의사사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여 담당 의사가 건강관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어떻게 환자 정보를 공유해 갈 것인가를 모색함

일본인들의 동조 의식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식

- 일본인들은 기존 틀의 시스템적 안전과 그 안전한 틀 내에서 심리적인 안심감을 느끼며 지내려는 욕구가 강해 곧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전·안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특성을 보임

-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 『공기의 연구(空氣の研究)』에서 지적하듯이, 일본은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동조(同調)압력’의 공기(空氣)가 지배하고 거기에 거슬리면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함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일본인들은 정책당국의 ‘아날로그적 대응’을 질책하기 보다는 “보건소 직원들 고생한다”, “정해진 규칙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며 순응해 왔음
- 코로나19 대처에서 일본은 방에 콕 틀어박혀 있으라는 ‘방콕’ 자숙모드를 이어오면서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 왔고, 일본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2021년 11월 14일 현재 75.6%로 높은 상황임

일본 정부의 감염 대책

-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 코로나19의 6차 유행에 대비하는 대책을 결정함(아사히 신문 2021년 11월 13일자)
- 그 핵심 내용은 1) 의료제공 체제의 강화, 2) 백신 접종의 촉진, 3) 치료약의 확보, 4) 무증상자 무료 검사의 확대 및 접종증명서 디지털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회복임
-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는 감염이 판명되었을 때 다음 날까지 감염자와 연락을 취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건강관찰을 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해명되지 않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의 급감 원인

- <그림1>에서 보았듯이 5차 유행기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감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움
- 5차 유행기 때까지는 ‘아날로그적 대응, 기정사실 엮매이기, 애매한 책임 주체’ 등의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미숙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음
- 그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21년 9월 이후 감염자가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무언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잘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정주성(定住性)이 강하고, 위생관념이 높으며, 대책 요청에 대한 협조성이 강한 일본인들의 속성이 감염자를 줄이는데 한몫 하였다고 할 수 있음

시사점

-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있어 사령탑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보 투명성 기능의 중요성도 두드러졌다고 할 것임
-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디지털'과 '원격근무'라는 기존 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인들의 속성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상황에 '알아서' 대처하는 성향이 강함
- 한국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불쑥 튀어나온 일탈자가 선의를 갖고 일하는 직원의 수고와 노력에 재를 뿌리고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막무가내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 안정성 지향의 스톡(stock) 속성이 강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이쪽저쪽으로 흔들리기 쉬운 플로(flow)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불필요한 이동 자제 및 대책 요청에 대한 협조성이 높은 일본 사회의 장점을 음미할 필요가 있음

국중호 통신원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kook@yokohama-cu.ac.jp

Houston 지역의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 The Way Home Continuum of Care(CoC)

미국의 노숙인 지원제도

- 연방 정부 수준에서의 노숙인 지원 및 주거에 관한 법률(Homeless Emergency Assistance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Act: HEARTH Act of 2012)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CoC)를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Continuum of Care(CoC)는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 노숙자 서비스를 계획, 감독 및 시행하는 협력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지방정부는 물론 비영리단체와 민간 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구성됨
- 대부분의 노숙자 문제 관련 연방보조금이 CoC를 통해 집행되며, 따라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CoC가 구성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미국 내 총 392개의 CoC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CoC는 뉴욕과 같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2개 이상의 권역을 포함함
- 각 지역별로 노숙인의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인구밀도, 노숙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CoC 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휴스턴 지역 노숙인 문제의 특성

- 2020년 기준 휴스턴 지역의 노숙인 수는 총 3,974명으로 미국 내 392개 CoC 들 중 25위에 해당하며 노숙인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임
- 전체 노숙인 인구 중 2,318 (58.3%)명이 노숙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있으며, 나머지 1,656 (41.7%) 명은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거리에 머무르고 있음
- 전체 노숙인구 중 흑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휴스턴 대도시 권역 인구 중 흑인 인구 비율은 22.5%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숙인구의 약 57%를 흑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음
-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노숙인구 중 약 40%가량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노숙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휴스턴 지역의 노숙인구도 자연재해, 실업, 약물/알콜 중독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노숙인구의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남

- 따라서 노숙자 지원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과 노숙인구의 특성을 다루기 위해 단순히 보호시설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 또한, 휴스턴과 같은 대도시 권역에서는 노숙인구의 분포를 어느 한 자치단체로 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권역 내 여러 자치단체 및 민간조직 간의 협력이 요구됨

휴스턴(Houston) 지역의 Continuum of Care(CoC) 프로그램

- 휴스턴 지역의 노숙인 지원프로그램은 CoC 조직인 “The Way Home Continuum of Care (이하 휴스턴 CoC)”에 의해 관리되며, 휴스턴시는 물론 인근의 Pasadena시, Conroe시, Fort Bend 카운티, Harris 카운티, 그리고 Montgomery 카운티가 포함됨
- 휴스턴 CoC는 2011년 조직되었으며, 권역 내 노숙인 대응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주도함
- 기존에는 휴스턴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독립적으로 노숙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2011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휴스턴 CoC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지역 내 노숙인 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을 관리하게 됨
- 휴스턴 CoC는 직접적으로 노숙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참여 자치단체들 및 비영리 단체들이 충분한 수의 주거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

“The Way Home” CoC의 주요 프로그램

- 2012년 이전 휴스턴 지역의 노숙인 지원프로그램 관련 기금의 경우 그 규모도 충분치 못하였으며,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였음
- 휴스턴 CoC는 노숙인 관련 기금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휴스턴 CoC는 개별 기금과 적절한 서비스 수요를 매칭시키고 양질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조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노숙인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노숙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화된 접근 시스템(Coordinated Access System)을 구축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여러 관련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권역 내 노숙인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 확립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형태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함

- 노숙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이나 임시 거주시설 대신 “주거 우선 모델 (Housing First model)”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춤
- 주거 우선 모델(Housing First model)은 노숙인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요건으로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후에 제공하는 접근방식임
- 이러한 접근방식은 관련 교육 혹은 치료서비스의 완료를 영구 주거프로그램 (Permanent housing program)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존의 노숙인 주거프로그램의 접근법과 차별화되는 부분임

프로그램의 효과

- 휴스턴 대도시 권역의 노숙인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권역 내 노숙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11년 대비 약 54% 감소)
- 2012년 이후 권역 내에 약 2,500호의 영구지원주택이 공급되었으며, 1년 이상 주거를 유지하는 비율이 85% 정도로 나타남
- 시스템의 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숙인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세 개의 표준화된 범주를 기반으로 체계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단기 개입(Short-term intervention), 중기 개입(medium-term intervention), 장기 개입(Long-term intervention)
- 노숙인 서비스 네트워크의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구성 조직 간 협력의 효과성이 증대되었으며,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향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방기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림 1 | Houston CoC 권역의 노숙인 인구 추이(2011-2020)

프로그램의 시사점

- 휴스턴 CoC의 사례는 개별 노숙인 프로그램 수준의 접근이 아닌 전체 서비스 제공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기반으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하였던 2018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노숙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영구지원주택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노숙인 지원프로그램들을 표준화된 유형을 바탕으로 분류함으로써 조직 간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인 노숙 인구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들 사이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숙인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또한, 향상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방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숙인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음

참고자료

- The Way Home's Community Plan to End Homelessness 2021-2026 update.
- 'Point In Time (PIT)' dataset 2016-2020,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 'Housing Inventory Count (HIC)' dataset 2016-2020,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2020 Houston Homeless Count Results Release
- CoC System Performance Measures Data Since FY 2015 by HUD

김진탁 통신원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
kjtstar6@gmail.com

망각에 맞서는 방법 : 아헨(Aachen)시의 역사 프로젝트

개요

-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총리와 대통령이 주변국에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는 보여주고 있음
- 물론 이러한 사과와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유대계와 주변 서방 열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의 거리에 설치된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¹⁾이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을 위한 프로젝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아헨(Aachen)시의 “Wege gegen das Vergessen 1933-1945”(망각에 맞서는 방법 1933-1945)가 있음

프로젝트의 역사

- Wege gegen das Vergessen 1933-1945 프로젝트는 아헨시에서 마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시민들과 정당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1996년 10월 기민련, 사민당, 녹색당의 동의로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음

1) '걸림돌'이라는 의미로 주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과 생몰년을 거리의 바닥에 10cm 정도 크기의 포석으로 설치한 것임.



1933 Wege gegen das Vergessen 1945 Aachen



| 그림 1 | Wege gegen das Vergessen 프로젝트의 로고

- 이 프로젝트는 1997년 아헨 시민대학(Volkshochschule)으로 이관되어 진행되었고, 2004년에는 공식적으로 아헨시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음
- 2008년부터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나치 시대와 현재의 극우주의를 기억하는 지역의 정치 활동의 역량센터로 인정받기 시작했음
-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나치 시대 증인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학생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나치 독재정권에 의해 박해받거나 정치, 인종차별, 이념, 종교의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임
- 시민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40곳 이상의 장소에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현재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임
- 또한, 아헨시의 관광 사무소와 시민대학에서 설치된 기념물을 따라 관광할 수 있는 시티투어 및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기념패는 아헨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Aachen)의 디자이너 클라우스 엔드리카트(Klaus Endrikat)가 디자인을 맡아 대부분은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슈톨퍼슈타인이 바닥에 설치된 것과는 달리 더욱 눈에 잘 띄도록 제작되었음

주요 설치 장소 및 내용

- 2021년 11월 현재 총 39개의 기념패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념패의 설치 장소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장소	기념패	내용
아헨 중앙역		<p>“1933년부터 아헨 중앙역은 많은 사람이 나치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역이었다. 그들은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 탈출했다. 이 역은 많은 사람에게 납치 및 추방의 첫 번째 역이기도 했다. 1942년부터 대부분의 유대인 아헨시민들이 수용소 등으로 추방되었다.”</p>
구 정부청사		<p>“이 건물에는 1933년부터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 사무실이 있었다. 나치에 의해 박해받을 사람들은 감옥과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에 이곳에서 구금되고 심문받고 학대당했다.”</p>

장소	기념패	내용
<p>몬하임거리</p>		<p>“이곳에 안네 프랑크가 1933년 6월부터 1934년 1월까지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 그의 가족이 나치를 피해 암스테르담으로 탈출했을 때 이곳에서 그의 할머니 로자 홀렌더-슈테른(Rosa Holländer-Stern)씨와 몇 달간 거주했다.”</p>
<p>발트프리드호프 대십자비</p>		<p>“독일의 권력욕은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대전에만 6천2백만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4천 명 이상의 아헨시민들이 나치 독일 군인으로 징집되어 목숨을 잃었고, 2,5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p>

관리와 교육

- 아헨시에서는 매년 11월 14일 국민애도일(Volkstrauentag)을 망각에 맞서는 방법 프로젝트의 기념일로 동시에 지정하여 기념과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음
- 시민대학에서는 반기별로 10회가량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접 기념패가 설치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강의실에서 강연, 시청각 자료 및 사료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7. Januar – Holocaustgedenktag:
Damals verfolgt – heute vergessen
Vortrag
 Der 27. Januar ist der Gedenktag für alle Opfer des national-sozialistischen Deutschlands, denn an diesem Tag im Jahr 1945 wurden die Häftlinge aus dem Konzentrationslager Auschwitz befreit. Seit mehr als 20 Jahren kommen zahlreiche Institutionen und Initiativen, aber auch Vertreter*innen der damaligen Opfergruppen an diesem Tag zusammen, um die Erinnerung an die Shoah wachzuhalten und sich mit Antisemitismus und Rassismus zu beschäftigen.
 Nachdem im letzten Jahr die Oral History und Zeitzeug*innengespräche im Mittelpunkt gestanden haben, werden wir in diesem Jahr den Fokus auf die *Zweitzeug*innen* legen. Hierzu wird es einen Vortrag von *Zweitzeugen e. V.* geben.
Dr. Holger A. Dux, Yvonne Hugot-Zgodda, Zweitzeugen e. V.
 212-04019
 27. Januar 2022
 Do 18–19.30 Uhr · Kein Entgelt
 vhs, Peterstraße 21–25, Forum

Veranstaltungen zum Thema *1700 Jahre jüdisches Leben in Deutschland* finden Sie in unserem gleichnamigen Flyer sowie im Programmheft 2/2021.

Bitte vergewissern Sie sich auf unserer Website, dass die Informationen zu den angegebenen Veranstaltungen aktuell sind:
www.vhs-aachen.de/programm/politik-gesellschaft/

Information

Dr. Holger A. Dux
 Telefon: +49 241 4792-172
 E-Mail: holger.dux@mail.aachen.de

Anmeldung

Volkshochschule Aachen
 Peterstraße 21–25
 Telefon: +49 241 4792-111
 Telefax: +49 241 406023
 E-Mail: vhs@mail.aachen.de



**Ausstellung, Film,
 Rundgänge, Vorträge**

www.vhs-aachen.de



자료: VHS Aachen

| 그림 2 | 2021년 하반기 Wege gegen das Vergessen 프로젝트의 교육프로그램 홍보물의 일부

- 동시에 우익 극단주의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우익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교육은 당시의 나치 독일을 탄생하게 했던 일반 독일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음. 당시에는 추종했고 지금은 잊었다(damals verfolgt – heute vergessen)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시사점

- 아헨시의 망각에 맞서는 방법 프로젝트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과 반성, 특히 나치 독일 시대를 비롯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지방의 도시 차원에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시민대학을 통해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와 건전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는 연방선거, 지방선거의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유럽 난민 사태로 극우정당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고, 구 동독지역에 극우정당이 제1야당²⁾으로 선출되기도 했지만, 아헨 지역은 5% 미만의 득표율로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에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

2) 극우정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독일의 정치에서는 극우주의에 대한 경계로 암묵적으로 연정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2019년 튀링겐(Thüringen) 주 주지사 선거 때 극우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자 전국적으로 비난이 일어 재선거했던 사례가 있음